

4월 전북수출 7억500만달러

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농산가공품 등 주요 품목 투자릿수 이상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38.6% ↑

전북 수출이 2016년 1월 이후 27개월만에 월간 7억달러를 돌파했다. 전북도는 24일 정밀화학원료와 합성수지, 농산가공품 등 주요수출 품목이 투자릿수 이상 증가한데 힘입어 4월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와 전주세관에서 발표한 2018년 4월 전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라북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8.6% 증가한 7억5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수출은 올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4월 전국적으로 수출이 1.5% 감소하였으나 38.6% 증가율을 기록, 전남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도내 수출을 이끌고 있는 업종인 정밀화학원료는 중국기업과 대규모 플리실리온 공급계약 체결, 수출 통계지역 환원(제조장소 : 서울본사→

전북)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3.2% 증가한 1억 달러를 기록(1억 1,354만 달러)했다.

또한 합성수지(5,448만 달러, 27.8%), 건설광산기계(5,060만 달러, 31.5%), 농약 및 의약품(3,708만 달러, 49.1%), 농기계(3,419만 달러, 53.7%) 등 주력 수출품목이 대부분 호조세를 유지했다.

한편 4월 자동차 수출은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의 영향으로 29.2% 감소한 5,389만 달러에 그쳤다. 수출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로의 수출이 45.9% 증가한 4억2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유럽(9,381만 달러, 38.9%), 북미(9,347

만 달러, 43.5%), 중동(5,750만 달러 43.0%), 중남미(3,670만 달러, 28.9%) 등으로의 수출도 고르게 증가해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시장 다변화 정책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등 도내 대기업들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제지표의 하나인 수출실적이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것으로, 전북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기술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대통령 개헌안 '불성립'

의원 114명만 투표 참여 한국·정의 등 야당 불참 의결정족수 192명 미달

민주 "홍준표 한국당 대표 개헌 무산의 주범" 주장 "더 심하게 말하면 대선불복"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14명만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자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국회에 따르면 투표시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명패를 주고, 개표 전에 명패를 통해 의결정족수를 파악한다. 만약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면 개표가 무의미한 만큼 의장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명패를 확인한 결과, 투표 참여의원 수가 개헌안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며 "월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해 달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

도 없다"고 호소했다.

투표 불성립 선언시 대통령 개헌안 운명을 두고는 계류냐, 폐기냐를 두고 해석이 다양하다. 단 계류든, 폐기든 상위 규정인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 만큼 이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밖에 민주당 일부 의원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표단속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과 김중훈 민주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소속 의원 118명 중 6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투표 불참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토론 이후 모두 퇴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개헌연대가 제안한 개헌협의체 구성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국민투표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인영·최인호·전현희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 개헌 무산 책임을 돌렸다. 대선불복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개헌 무산) 주범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하지는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특정정당에 유리한 것이 국민약속보다 더 우위라고 생각할 수 없다. 더 심하게 (말하면) 대선불복이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공정선거 다짐하는 도지사 후보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4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접수를 마친 뒤 공정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의당 권태홍, 민주평화당 임정엽,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민중당 이광석 후보.

靑 "개헌안 국회 투표 불성립 유감"

"야권, 직무유기... 정부, 국정운영 반영토록 힘 쓸 것"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국회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것에 유감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야당 의원들이 위험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란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

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6·13 지선 승리로 이끌 것'

민주 전북도당, 선대위 명단 발표

상임선대위원장에 김윤덕 당위원장·홍영표 원내대표 등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수혁 의원·안호영 의원 등이 임명
상임고문단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장영달 우석대 총장
대변인에 정호윤·국주영은·최영규·강성봉 도의원

채정룡 군산 지역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김형중 익산을 지역위원장 대행 등이 임명됐다.

상임고문단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장영달 우석대 총장, 총괄선대본부장은 정호영 전 도의원, 종합상황실장은 유충종 전북도당 사무처장 등이 포진됐다.

대변인으로는 정호윤·국주영은·최영규·강성봉 도의원 등이 손발을 맞춘다.

김윤덕 위원장은 "전북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70%에 달하는 국민들의 호응으로 순항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6.13지방 선거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